

관건선거도 모자라 유령동아리 보조금·쪼개기 수의계약까지

전북자봉센터 꼼수 운영 '들통'

도 감사결과, 봉사자 실비 지급 확인 소홀 등 다수 적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논란이 된 전북자봉센터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한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 부적절, 쪼개기 수의계약, 유령 동아리 지방보조금 지급 등 각종 꼼수 운영을 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전북자봉센터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한 프로그램 공모와 심사를 통해 봉사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토록 했지만 선정기준과 평가는 커닝 관례를 이유로 선정·지원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기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동아리 302곳 중 245곳은 공정한 공모와 평가를 통해 선정됐지만 연대지원이란 이름하에 임의로 57곳의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했다. 심지어 전북자봉센터는 시도자원봉사센터에 미등록 된 이른바 유령 동아리 158곳의 단체에도 지방보조금

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자봉센터는 관권선거 의혹과 함께 센터 소속 직원이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자원봉사단체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뒤 지원대상 봉사동아리로 분류한 뒤 지원해 약 1800만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센터 직원은 경찰조사는 물론, 보조금 횡령으로 감사에 적발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그동안 전북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해야 할 보조금이 이렇듯 존재자체도 불확실 한 다수의 봉사단체에 비밀비재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전북자봉센터는 지급된 보조금 정산검토도 소홀히 했다.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사용목적이 맞게 물품구입,

봉사수혜자와 사진 등 실적보고서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하지만, 수혜자 명단이 누락되거나 수령증도 받고 있지 않은 등 실제 봉사물품이 전달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실비조차 실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됐는지도 파악이 안됐다.

2019년 전북에서 진행된 전국체육대회에 약 120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집·투입됐지만 이들에게 지급될 실비는 자원봉사 대표자라는 111명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해당 실비 5113만 8000원이 실제 1200명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군자원봉사센터에 지급된 자원봉사증 발급기는 '물품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시군에 양여해야 하지만 중간의 모든 행정단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원봉사증 발급기는 시군이 관리할 수 없게 했다.

자원봉사증에 대한 소모도 예측해 추가 구입을 하는 등 사비비 지출을 억제해야 하지만 전북자원봉사센터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을 소진하기까지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해단식 대행업체에 대해 1곳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이뤄지지 않자 발대식과 해단식을 쪼개 수의계약하는 꼼수도 발생했다.

성적이 같은 단일 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해야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무감사를 발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면서 "각 사안에 대해 주의·시정·훈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원봉사센터 전·현직 센터장들은 송하진 전 도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관리감독 등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등 '관권선거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뉴시스

민주-전북도,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박광온 원내대표·서삼석 예결위원장·김민석 정책위의장 참석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등 민주당 차원의 대응에 도민들 관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북도를 찾아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과 주요현안 협의에 나선다. 정부예산 단계에서 75% 이상 삭감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다음날인 13일 오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서삼석 예결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 한병도 도당위원장, 전북 9곳 지역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임상규 행정부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 노홍석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김관영 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2024년 국가예산 및 주요현안 설명과 박광온 원내대표 주재로 전체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박광온 대표 일행은 전북도의회 앞 마당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 단식에 나서고 있는 임승식 김성수 전북도의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투자공사 임직원, 내부 지침 지속 위반'

2019년부터 5년간 47건... 근무시간 개인주식 매매 등
한병도 의원 "도덕적 해이 여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내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1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 주체인 투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라고 지적하며, "국민 신뢰와도 직결된 만큼 공사는 매매지침 위반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가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1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매내역 지연신고(15건), 근무시간 매매(14건), 해외상장주식 매매와 미신고계좌와 사외계좌(2건), 거래정지기간 불이행과 계좌 지연신고(1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매지침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인원은 6명에 달했다. 한 위반자는 근무시간 매매, 미신고계좌 사용, 매매내용 지연 신고가 연이어 적발됐다.

하지만 준법감시인 주의장 조치로 그쳤고 이듬해 의무보유기간 위반까지 적발되자 그제사가 거래정지 1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임직원이 개인주식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

이덕춘 변호사, 송인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내년 전주를 총선 준비 중인 이덕춘 변호사가 국민의힘 송인석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12일 전주지법에 송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적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의 발언은 지난 세기의 망국적 지역감정, 지역차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송 의원은 전북에 사과하고 명예전복도민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변호사는 삭발식을 진행 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시스

"새만금 정상화 위해 항거할 것"

도내 시민·사회단체들,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결성
"尹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상 초유의 일"

전북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만금 지키기에 나섰다.

전북야생생물,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 전북의 종교·경제·사회·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12일 전라감영에서 출범 선언식을 열고 "새만금 정상화를 위해 항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허위사실로 전북에 책임을 덧씌우더니 마침내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을 연동시켜 SOC 예산을 무제한하게 난도질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젠 폭거로 예산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잼버리 사태의 원인이 된 화장실과 위생문제, 폭염과 의료대책 등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분명 조직위와 여가부 책임이 가장 크다. 책임소재를 가리지도 않고 초장부터 전복책임론으로 포장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2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출범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예산 78%를 보복성 칼질로 양갈음 한 것은 이성이 실종된 야만"이라며 "군부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예산독재"를 시정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두

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정치적 프레임 씌워 자행된 새만금 죽이기 차원의 무지한 공격은 온 몸으로 막

아야 마땅하다"며 "새만금 국가사업이 정상화되고 예산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